

처음 시작하는 농사, 온실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선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이기가 겁납니다. 근데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이렇게나 높으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네요.” 얼마 전 귀농을 결심한 Y씨는 소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빌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온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임차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비닐하우스 규모도 2,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좌절했습니다.



이런 규제 탓에 그동안 귀농인들은 첨단 온실 신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영농기술이 부족한 귀농인 특성상 소규모 영농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농인에 한해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 설치 규모를 661㎡ 이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며 지금이 부족한 귀농인도 보다 쉽게 영농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소규모 영농을 선호하는 귀농인의
농업기반 마련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개선 전

자동화비닐온실 설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사업 규모는 2,000㎡ 이상~20,000㎡로 제한

개선 후

귀농인이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 임차 잔여기간은
5년 이상, 지원범위는 사업자별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지침개정 (농식품부, '14.4월)

산림 훼손 막고, 귀농인 거주지도 생기고!

“농림지역을 피해 전원마을을 지으려면 산지를 깎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기반조성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 정착금이 커지니 귀농예정자를 유치하기도 참 힘듭니다.” B전원마을 시행사 직원의 말입니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주택단지인 B마을은 당초 도로 가까운 곳에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원마을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사업부지에 농림지역 비율이 50%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B마을은 산지 훼손 없이 도로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를 활용하면 농림지역 비율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원마을 조성 시 농림지역 비율 제한 탓에 산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지만, 이젠 난개발 없이 귀농인의 정착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농촌지역 난개발을 방지, 기반조성 비용을 절감해 주거지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



개선 전

농림지역 비율이 50% 이내인 경우만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

개선 후

자투리 농지*(2만㎡)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이 50%를 초과해도 전원마을 조성 가능

* 자투리 농지 : 농업진흥지역 중 도로·철도 등의 설치, 택지조성, 산업단지 지정 등 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이하의 농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농식품부, '14.9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고 빠르게 해외직구 해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S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맘에 드는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신발류는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구입 버튼을 눌러 미화 152불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품이 국내로 배송되자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란 이유로 세금과 통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고, 물품을 받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구두솔을 실수로 같이 구매한 탓이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 완화로 이 같은 국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미화 100불(미국은 200불) 이하 자가 사용물품에 대해선 통관목록(23개 항목) 제출만으로 수입신고(69개 항목)를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목록통관 대상을 구입한 소비자는 신속한 면세통관과 통관 수수료 절감으로 편리한 해외배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해 해외 직구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더 싸고 빠르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 관세, 통관 수수료 등 연 572억원의
가계 지출 절감(추정)



개선 전

목록통관 대상 : 의류 · 신발 등 6개 품목

개선 후

목록통관 대상 : 모든 소비재로 확대

단, 국민건강과 관련된 식 · 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제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14.6월)

학자금 중복 대출? 신입생이라면 OK!

지난해 대학입시를 치른 H군은 목표로 하던 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소식을 들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저 등록한 대학의 대출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H군은 어려운 형편에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이런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 동일 학기 중 중복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개선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신입생들은 1차 합격 대학의 대출금을 반환이 늦어지더라도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을 먼저 진행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 3,000여명의 학교이동 대출자의
등록금 추가 마련 부담 해소



개선 전

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중복 대출 불가
학자금 중복 대출 금지로 인해 신입생이 추가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시 대출 불가

개선 후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 가능
신입생의 경우, 1차 합격 대학에 납부한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추가 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포 (교육부, '14.1월)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어학캠프,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애도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비싼 금액에 엄두를 못 내겠어요.” L씨와 같은 입장인 학부모들의 고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대학이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어학실, 기숙사 등의 시설과 우수한 강사들을 활용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를 운영하려 했으나 규제로 인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 이후론 대학 내 어학캠프가 활성화됐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강료 감면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도 비싼 사교육비 부담 없이 국내에서 양질의 어학연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국내 학생들의 유학비 지출 축소, 외화 유출 최소화.

2014년 여름방학 중 총 52개 학교에서 어학캠프 운영, 1만여명 참여, 이중 2,700여명은 수강료 감면 혜택



개선 전

초·중등학생 대상, 대학교 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 금지

개선 후

방학 중 대학교 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해져 사교육비 부담 완화
'어학캠프 운용을 위한 MOU 체결기준' 안내 (교육부, '14.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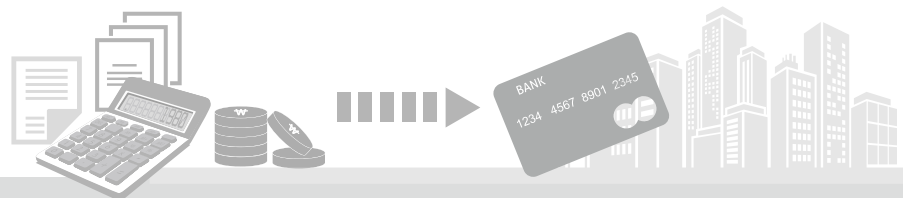
143

신용카드로 각종 부담금 납부 가능

각종 부담금, 카드 결제로 간편하게!

“고지서를 죄다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 납부를 해야 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C씨는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느라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C씨는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손쉽게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이 다양화되며 국민의 편의도 늘리고 징수율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요율도 국세 가산금 수준을 넘지 않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 편의 증진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



개선 전

부담금 부과, 감면, 환급절차만 규정, 납부수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일부 부담금의 경우 가산금 요율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높음

개선 후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기재부, '14.2월 제출)

졸업학점 걱정 없이 주경야독!

“낮에는 업무부담, 밤에는 학습 부담으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심각하게 휴학을 고민 중입니다.” 만학도 H씨는 못 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사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느라 졸업학점 취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H씨의 고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간의 산업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무경력이 아닌 대학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만이 사내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관련있는 근무 경력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사내대학 학생의 학업부담 완화 및 사내대학 활성화

'14년도 현재, 8개 사내대학에 608명 학생
재학 중



개선 전

사내대학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졸업학점으로 불인정

개선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학점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내대학
학점으로 인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14.12월)